

# 군산-석도 한·중 카페리 증편 청신호

최근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중국 석도 간 한중 카페리 증편에 대해 양국이 긍정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1일 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에 따르면 군산 한·중 카페리 항차 증편 건이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채택돼 증편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전북도는 군산-중국 석도 간 카페리선의 운항횟수가 매주 3회에 불과, 화물 증가 수요에 효율적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증편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왔다.

실제로 2008년 개설한 군산-중국 석도

## 김관영 의원 “증편안 내년 한·중 해운회담 의제 채택돼”

항로는 개설 이후 지난해까지 컨테이너 물동량이 1만 5,085TEU에서 2만9,970TEU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10%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또 신선식품 등 물동량 증가에는 지난 7년간 연평균 44%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군산-중국 석도 항로 운항 횟수는 3항차에 불과, 적잖은 화물이 타지역 항만으로 빠져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게다가 인천항은 10개 항로 주 26항차, 평택항은 5개 항로 주 14항차 운항이 이뤄지는데 반해 군산항은 1개 항로 3항차에 불과해 심각한 불균형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석도간 카페리선 증편으로 인천과 경기 평택항 이용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정부는 난색을 표명해 왔다.

이에 김관영 의원은 당초 증편에 부정적이었던 해양수산부를 설득, 회담 의제화에 포함시켰다.

김관영 의원은 “해양수산부를 설득하는데 전북도와 군산시는 물론이고 전북도민 여러분이 뜻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면서 “한중 정상이 두차례에 걸쳐 새만금을 한중경협단지로 키워가자고 합의한 만큼 앞으로 군산과 중국 석도간 바닷길을 더욱 넓혀갈 필요가 있다. 증편이 확정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중 해운회담은 1년에 1차례 개최되며, 군산-석도간 한중 카페리 증편은 내년 회담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광영 기자



## 국민의당, 전북 여성위원장 간담회

국민의당 전라북도당은 1일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회의실에서 전북 여성위원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홍성임 전북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10여명의 여성위원장은 향후 예정된 전라북도당 여성위원회 워크숍 안건을 상정 논의했다.

김광수 도당위원장은 “정진숙 사무처장을 비롯해 여성위원회의 권익 신장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전북 제1정당 모습을 갖춰 나가는데 여성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숙 도당 사무처장은 “여성의 섬세함과 긍정적인 힘으로 정치활동에 참여, 국민의당 당원 배가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고 독려했다.

정 처장은 이어 “여성 정당인으로서 갖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중앙당 뿐만 아니라 도당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면서 “여성의 힘으로 여성위원회가 톱플플러 정권교체에 앞장서자”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 여야 11주 추경안 최종타결

여야 3당은 1일 11주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여결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주원 중 4,654억원을 삭감했고 3,600억원을 증액해 순삭감액은 1,054억원이다.

여야 3당은 정부 원안에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집행률이 낮은 사업,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 등을 포함해 추경사업 요건에 부적합한 사업을 위주로 총 4,654억원을 삭감했다.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액은 5,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삭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금 관련 출자규모는 650억원 삭감됐다.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623억원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관광산업 융자지원, 국내관광기금 등 분야에서도 삭감이 이뤄졌다.

증액부분의 경우 교육시설 개보수와 지방교육 재정 지원, 저소득층 지원, 의료급여 영상보조, 국가예방접종,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저소득 생리대 지원 등에서 총 3,600억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여야간 교육시설 개보수 지원 목적 예비비를 2,000억원 증액했다. 이에 예비비는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와 설마를 교사를 위한 통합관사 신축, 재래식 학교 화장실 개보수, 석면교실 제거 등에 쓰인다.

저소득층 지원에서 1,500억원 이상을 증액했다. 의료급여경상보조 800억원, 국가예방접종 28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159억원, 노인일자리 확충 48억원을 비롯해 발달 장애인 가족 지원, 저소득 생리대 지원, 남해안 적조 피해 지원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한편, 여야 3당은 1일 11주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누리과장(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추경안 본회의 통과 후에도 예산 집행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뉴시스

## 더민주 후보위원장 손혜원 유임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당 후보위원장에 손혜원 의원을 유임했다.

또 신임 대외협력위원장은 초선의 정재호 의원이 임명됐다.

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직 담지자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손혜원 후보위원장은 홍익대에서 응용미술학을 전공한 디자인 전문가로, 아파트 ‘힐스테이트’, 소주 ‘처음처럼’, ‘참이슬’ 등 히트 상품의 브랜드 네이밍을 해왔다.

그는 이번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표가 당에 영입한 대표적인 친문재인계 인사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당명과 로고 변경을 주도했고, 이후 총선에서 정청래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에 전략구천대 국회에 입성했다.

신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재호 의원은 경기 고양시을을 지역구로 문 제20대 초선 의원으로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국무총리실 민정수석 등을 지냈다.

그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선거캠프에서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낸 바 있어 ‘안희정계’로 통한다. 정 의원이 추후 유력 대선 주자인 안 지사와 당 지도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시스



정기국회 개회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정운천 의원, 추경심사에서 16억6000만원 반영

## 농수산대학 설계비 13억 · 지역특화산업육성비 2억 · 지역콘텐츠 균형발전 사업 1억6000만원

국회 정운천(새누리당, 전주) 의원은 1일 추경심사에서 전북에 시급한 현안 사업 16억6,000만원을 반영했다.

전북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한국농수산대학 운영지원비 13억, 지역특화산업육성 2억, 지역콘텐츠사업 균형발전 사업 1억6,000만원 등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이 160명으로 증원됐으나 기숙사와 강의동이 부족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급한 내년도 설계비 13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 내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또한 2018년까지 건물 신축비 총 360억원이 본

예산에 확보돼 신규 농업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 2억원이 확보돼 최근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조선기자재산업에 고용안정, 지역경제 안정화, 창업지원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콘텐츠사업 균형발전 사업의 경우 고군산 관광지를 중심으로 실감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명소화 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다.

군산시에 소재한 고군산 지역의 경우 최근 도로가 개통되면서 육지와와의 접근성이 개선돼 산호 관광지로 부상되고 있다. 고군산군도는 유인도 16개를 포함하여 63개

의 섬으로 구성돼 있으며, 선유 8경 등 관광지로 유명해서 연간 47만명의 관광객이 고군산군도를 방문하고 있다.

전북도는 고군산군도에 VR·AR(가상현실 기반 실감콘텐츠) 기반의 새로운 투어 플랫폼 구축 지원을 통해 고군산군도가 낙후 도서 지역이 아닌 차세대 명품 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정운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안보 등 시급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전북에서도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 정 의장 “우병우 물러나라”... 새누리 집단퇴장

###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정면 비판에 “야당 대표나” 강력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퇴진을 공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는 등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관계가 얼어붙는 양상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쏟아진 소리를 듣고,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대한 작심 비판에 나섰다.”

그는 “국민의 공복(公僕인) 고위공직자,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티끌만 한 허물도 태산처럼 관리해야 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은 실질적으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자리”라며 “그러나 그 당사자가 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최근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특권, 공직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부패와 부패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을 미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야권에서 논의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두둔했다.

그는 “이번 정기회의 기간 내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관 설치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서도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며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면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응분의 제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남북이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은 곤란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는 수단이다. 때론 유용하지만, 때론 위험한 수단”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수단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금 남북의 현실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위태롭다”며 “우리 국민과 국회가 언제까지 남북한 정부가 벌이는 치킨게임의 관망자로 남아있어야 하느냐”고 사실상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 의장은 이처럼 우 수석의 퇴진과 사드배치 문제를 질타하자, 이를 듣고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금 뛰히는 거냐”며 강력 반발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금 국회 의장이 원내대표 연설을 하는 것이냐”며 “양당 간에 중재를 해야 할 의장이 자기 의견을 어디 원내대표가 연설하듯이 하냐”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정진숙 원내대표는 정 의장의 개회사가 끝나자 단상으로 다가와 정 의장에게 강력 항의했지만, 정 의장은 “연설문을 잘 읽으십시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뉴시스

## 유성엽 “문화예술위 지원금 서울 편중”

국회 유성엽 의원(국민의당, 정읍고창)은 1일 수도권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을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이 내놓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최근 3년간(2014-2016년) 17개 지자체 지원금 현황을 들여다본 결과, 지원금 총액 167억5,500만원 중 서울이 140억2,800만원으로 전체 비율 84%를 차지했다.

이어 광주 5억5,800만원, 경남 5억2,200만원, 경북 4억4,300만원, 제주 3억1,000만원, 경기 1억2,200만원, 대전 1억7,700만원 순 등으로 나타났다.

행사 횟수에 있어서도 총 137회 가운데 서울이 87회로 가장 많았고 경남 12회, 경북 8회, 경기·대전 각 5회, 광주 4회, 제주·강원·부산 각 3회, 전북·대구 각 2회, 충북·울산·전남 각 1회에 그쳤다.

유 의원은 “서울 천만 시대가 무너지지 마땅히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서울공화국에 머물러 있다”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연의 의무가 모든 이가 창조적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설립된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어 “현실적으로 지역 안배의 균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 면 수도권과 지역을 의무적으로 구분하는 쿼터제 도입도 심 각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광영 기자

## 이춘석 남북특위장,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

이춘석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1일 오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열고,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현황과 구제 대책 등에 관한 해당 기업들의 민원을 청취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피해보상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정부확인금액과의 차액 3천여 억원 우선 보상, ▲추가 피해 제출자료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춘석 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로 납뽀를 맞은 입주기업들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피해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업체들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단을 폐쇄하면서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정부가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야당에서 개성공단 피해지원을 이번 추경 편성을 끝까지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되어 안타깝다”며, “본예산에서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특위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정원원 기자

## 송지용·강용구·정진세 도의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발의

송지용(더불어민주당, 완주1)·강용구(더불어민주당, 남원2)·정진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전북도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시·군이 현실실사와 평가를 거쳐 도지사 및 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업소다.

이번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적극 홍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쓰레기봉투,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보조,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 등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지용 의원은 “그동안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와 지원이 형식적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지역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